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0다29157 유류분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천마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조병홍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담당변호사 이규홍 외 2인)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0. 3. 24. 선고 2008나10943 판결
판 결 선 고	2012. 5. 9.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관한 판단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상속개시 시점인 2000. 9. 12. 당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2007. 9. 4. 또는 2009. 6. 10.을 기준시점으로 한 부동산 시가감정 결과에 근거하여 상속재산과 증여재산 등의 가액을 인정하는 한편, 원고 3이 피상속인인 망 소외 1로부터 1998. 3. 30.부터 1999. 11. 11.까지 4차례에 걸쳐 생활비 명목으로 증여받았다는 현금 13,000,000원을 위 원고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위 원고의 유류분에서 공제하면서 그 특별수익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동산인 상속재산과 증여재산 등의 가액을 산정하고 원고 3의 특별수익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의 범위를 확정하였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 산정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심 변론 과정에서 망 소외 1의 처인 소외 2가 피고 1에게 증여한 부동산과 피고 1이 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한 원고들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는데, 원심은 위 소외 2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피고 1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들에 관하여 별다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망인이 피고 1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인정하였고, 망 소외 1 또는 소외 2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피고 1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들에 관하여는 별다른 이유 설시 없이 망인이 그 부동산들을 소유하고 있다가 피고 1에게 이를 증여하였다고 인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원심은 그 판시 별지 <일람표 1> 순번 1. 부동산을 표상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등기부에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였고, 원심이 사실인정의 근거로 제시한 감정평가서 등의 증거에는 그 판시 별지 <일람표 2> 순번 2. 부동산의 존재와 시가에 관한 내용이 드러나지 않고 달리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그 부동산을 망인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재산에 포함시켜 그 판시 시가 상당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히 대조하고 추가로 필요한 심리를 진행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일환
-----	-----	-----

	대법관	신영철
--	-----	-----

주심	대법관	민일영
----	-----	-----

	대법관	박보영
--	-----	-----